

새만금청, 현대차 9조 투자지원 총력

새만금개발 2035년까지 169.6km² 우선 매립기로
공장·연구시설 들어서는 산업용지 37.5km² 확대
AI 데이터센터 착공 내년 3월... 현대차, 심의 신청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이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20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업 실행력 강화 △기업 중심 성장 지원 △지역과의 동반성장 △환경과 조화 등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새만금청은 먼저 새만금 개발 방식을 민간 투자 중심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초 2050년까지 매립할 예정이었던 240.5km² 중 2035년까지 169.6km²를 우선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립을 주도해 기업이 필요한 땅을 보다 빠르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수요에 따라 나중에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 12.2km²를 마련하면 전체 매립 면적은 181.8km²이 된다.

산업용지도 크게 늘려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재 12.1km²에서 37.5km²로 확대한다. 새만금의 산업 거점도 현재 1곳에서 4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항 소음 등으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곳은 땅을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한다.

새만금을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인세와 관세 감면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신산업 실증과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베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현재 7GW에서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새만금청은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클러스터, 수전해플랜트, 태양광발전사업, AI 수소시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로봇제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새만금 1산업단지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오후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1산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또 현대차그룹과 관련 기업의 직원들이 새만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산단의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착공에 이어 내년 말부터 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와 연계해 새만금을 로봇·자율주행·수소차·DXIT 등이 실제로 운영되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를 AI 시범도시로 지정하

고, 실제 도시에서 AI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하는 '피지컬 AI' 실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2, 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19일 원주군을 찾아 유희태 원주군수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역 현안과 민생예산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전북 발전 위한 현장행보 나서

혁신당 강경숙 의원, 완주 찾아 현안·민생예산 점검
“완주군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효능감 돌려드리겠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 중인 강경숙 의원(원내대변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완주지역 주요 현안과 민생예산을 점검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완주군을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와 면담하고 지역 주요 사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주신당단지와 국가기술폰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완주군이 글로벌 수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핵심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의 2027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군의 주요 현안 가운데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의 예산 복원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면담에는 조국혁신당 이효진 완주군 의원이 참석해 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완주군이 이미 58억 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을 마쳤고, 2021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도 확인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방비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이미 부지를 매입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만혁신연대는 지방자치 35년 만에 구성된 첫 비민주당계 의원 3명이 결성한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주민혁신연대’를 만나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주만혁신연대는 지방자치 35년 만에 구성된 첫 비민주당계 연대 기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주민혁신연대가 제기한 완주문화관광재단의 자정 기능 약화와 완주군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완주군 차원의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전북 곳곳에 혁신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완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효능감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18일) 김제시, 부안군, 임실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고민을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오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등 국가 의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반재판소의 한반법 합치 결정을 반영해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보상금 지급 앞순위자를 정할 때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유족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복지부 앞
릴레이 피켓시위 돌입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가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의정원 남원 연계 유치를 관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남원의 단합된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천 행동이다.

의회의 릴레이 시위는 지난 8월 10일 16명 전체 의원이 복지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며 포문을 열고 이어 11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마다 전체 의원들이 2인 1조로 피켓을 들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정원의 남원 동반 설립에 대해 외치고 있다.

/남원=김기호 기자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현장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 시장과 만나 지난 7월 24일 이후 다시 주택공급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주택 공급 여건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값

상승률과 주택보급률 등 주요 지표를 살펴볼 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벌설’로 인해 단기적으

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내 내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력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주거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광역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제안 | 민주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마사회 분사 남원 이전을 중심으로 4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광역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과 만나 한국마사회 분사 남원 이전과 함께 순창·담양 제5 경마공원 유지, 임실 경주 피역마 휴양센터, 장수 말산업 문화테마파크 조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해



박희승 의원
바이오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장수는 경주마 생산·육성·조련과

달라고 요청했다.

구상의 핵심은 4개 시군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데 있다. 남원은 마사회 본사와 함께 부상마 치료·회복, 말복지·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문화테마파크를 맡는다. 임실은 피역 경주마 휴양·재활과 전환훈련을 담당하고, 순창은 담양과 함께 제5경마공원을 조성해 경주와 치유승마 기능을 수행한다.

말의 생애주기를 연결하는 순환 체계도 제시했다. 장수에서 생산·육성한 말이 순창·담양 경마공원에서 경주한 뒤 부상하면 남원에서 치료와 회복을 거치고 임실에서 휴양과 재활을 받는다.

/오만호 기자

사법부 의사결정 과정 의혹 제기

민주 이성운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 대법관 추천과정 행태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김용민·김승원 국회의원, 진보당 손술 국회의원(비례)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의 조화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성운 의원 등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추천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후보 4명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법사위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재추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후보자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으며, 노 처장은 후보자들에게 접촉한 뒤 사과의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단순한 검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했다”며 “사퇴를 종용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과거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에서 간부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연결하며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화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재추천과 관련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누가 지시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퇴 의사 타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경필 처장에 대해서도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한 만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끝으로 조화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뒤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전화하게 하지 말고 직접 국민과 국회 앞에 나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국민에게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